



캘리포니아 주

✔ 주민발의안 제1호

찬성: 주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여 재향군인 지원과 저소득층 주택 공급 등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
✔ 주민발의안 제2호

찬성: 경기가 좋은 해에 주정부가 '비상 준비금(rainy day fund)'을 더 많이 적립하여, 재정이 어려운 해에도 주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

✔ 주민발의안 제3호

찬성: 현행 고소득자 세금을 영구적으로 연장하여 초·중·고교(K-12) 교육, 커뮤니티 칼리지, 의료 및 기타 필수 공공 서비스의 재원으로 사용합니다.

✔ 주민발의안 제4호

찬성: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선거 운동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이는 특정 이익집단과 부유한 기부자의 선거 자금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✔ 주민발의안 제5호

찬성: 캘리포니아의 주민소환(리콜) 절차를 개정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줄이고, 주 선거의 결과가 과반수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정되도록 합니다.

✔ 주민발의안 제37호

찬성: 중산층 캘리포니아 주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계약금(다운페이먼트)을 지원하는 주택 구입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.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.

✘ 주민발의안 제39호

반대: 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우편투표용지 뒷면에 개인 신분증 번호의 일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. 투표율을 낮추고 투표 장벽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초래합니다.

✔ 주민발의안 제40호

찬성: 억만장자의 자산에 대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여, 연방정부가 예산을 삭감한 메디칼(Medi-Cal) 등 필수 의료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합니다. 현시점에서 의료 서비스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.

✘ 주민발의안 제41호

반대: 세금 관련 발의안을 투표에 부치기 전에 새로운 감사를 거치도록 요구합니다. 납세를 회피하려는 억만장자들이 자금을 지원한 안건으로, 주정부가 향후 세입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.

✘ 주민발의안 제42호

반대: 개인 재산과 투자 자산에 대한 신규 과세를 전면 금지합니다. 정당한 몫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억만장자들이 자금을 지원한 안건으로, 향후 부유세 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.

✘ 주민발의안 제43호

반대: 투표에 부쳐진 지역 특별세 발의안의 결과를 소수의 유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과반수 유권자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립니다.

✘ 주민발의안 제44호

반대: 지역 보건 클리닉이 수입의 90%를 환자 진료에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합니다. 이에 따라 클리닉의 홍보·교육 활동과 문화·언어 지원 서비스가 축소되고, 다수의 클리닉이 문을 닫게 될 수 있습니다.

✘ 주민발의안 제45호

반대: 일부 사업이 기존의 환경 심사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환경 기준을 약화시킵니다.



로스앤젤레스 카운티

✓ 안전 E - 윤리

찬성: LA 카운티에 독립적인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, 위원들이 정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.

✓ 안전 A - 중재

찬성: LA 카운티의 필수 공공안전 직원(경찰·소방 등)이 노사 분쟁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허용합니다. 이러한 결정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하는 것을 줄입니다.

로스앤젤레스 시

✓ 안전 TE

찬성: 팰리세이즈 산불 피해 주민에게 부동산 양도세를 일회성으로 면제합니다. 이를 통해 주택 소유주가 자신의 주택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.

✓ 시 헌장 개정안 LA

찬성: LA 시의 예산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고, 자본·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며, 공공사업국에 대한 시의회의 관리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변화를 도입합니다.

✓ 시 헌장 개정안 EE

찬성: 언어 지원(통·번역 서비스) 보장을 시 헌장에 명문화하고, 시 운영 방식을 변경합니다. 시의회 회의를 주 1회로 조정하고, 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윤리 및 책임성 강화 조치를 포함합니다.

✓ 시 헌장 개정안 PRK

찬성: 향후 10년에 걸쳐 LA 시의 공원·레크리에이션 예산을 두 배로 늘려 공원 시설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합니다.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사는 LA 주민이 많은 만큼,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.

✓ 시 헌장 개정안 PRT

찬성: LA 항만국이 주민들의 해안가 이용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, 임대 계약과 협약이 일차리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. 또한 최대 임대 기간을 연장합니다. 항만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.

✓ 시 헌장 개정안 SC

찬성: LA 통합교육구(LAUSD) 교육위원 후보에게도 시장 후보와 동일한 선거자금 규정을 적용합니다. 시 헌장이 간소해져 앞으로 개정하기도 쉬워집니다.